

월세방 2030 올분 “文취임사 어디갔나”

21차례 정책 집값만 띄워...젊은세대 엄두 못내 靑·국회 그들 다주택 들킬까 전전공공... ‘분노’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이 확산하면서 20·30대 젊은 층의 박탈감과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21차례 부동산 정책에도 상승하는 집값이 잡히지 않아 젊은 세대들은 “1채의 집도 마련하기 불가능하다”고 호소한다.

8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80명 가운데 42명이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앞서 1월 규제지역에 주택 2채 이상을 소유한 총선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2년 내 실거주 1채를 제외하고 매각한다”는 서약을 받았다.

그러나 이를 지킨 의원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다주택자 의원도 41명에 달한다. 비율로 따지면 민주당 의원보다 더 높다.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한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는 12명이다.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사실이 밝혀지자 청년들이 가장 먼저 반겼다.

디시인사이드 등 젊은 세대가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기회는 불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불공정할 것”이라는 글이 눈에 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비판 것이다.

일부 청년은 남의 나라 일처럼 아예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쿨’한 게 아니라 다주택을 현실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김진아씨(여·가명·33)는 “다주택은 나와 무관한 일인데 굳이 화낼 필요조차 못 느낀다”며 “어차피 달라질 것도 없는데 그걸 비판해서 무엇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김씨는 밤 12시 동대문 의류 쇼핑몰에 출근해 12시간씩 일한다. 한 달 수입은 약 300만원이다.

수익은 적다고 할 수 있으나 남는 게 없다고 한다. 대출금 상환에 허덕이는 부모에게 수익의 상당 부분을 주기 때문이다.

김씨는 “인생이 공정하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답하게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다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들을 향해 “처분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참여연대는 지난 6일 48시간 동안 정책 책임자 다주택자 국회의원과 정부 고위공직자들에게 실거주 외 주택을 한 달 내에 매각하는 것을 촉구하는 긴급 서명에 돌입했다.

참여연대는 “문제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동안 21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땀질식 ‘빚갚 규제’와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이 여전히 불안정하다”며 “집값 상승에 대

한 상대적 박탈감과 심리적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후보자 시절 서약했던 ‘실거주 외 주택 처분’ 자료를 공개하는 동시에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당 소속 다주택 국회의원들의 실거주 외 주택 보유 상태를 조사하고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의 주택처분 서약을 공개해야 한다”며 “서약을 즉각 이행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최이슬 기자

여고생 치마 속 찌던 발가락 몰카범 적발

여고생의 치마 속을 카메라로 이용해 촬영하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A씨(40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15분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생활용품점에서 슬리퍼를 신고 발가락 사이에 소형카메라를 숨겨 10대 여고생의 치마 속을 불법촬영한 혐의다.

여고생의 치마 아래로 발을 내밀고 촬영하려던 A씨는 한 시만에 의해 붙잡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붙잡은 시민은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채팅서 만난 남녀, 필로폰 투약하다 붙잡혀

온라인 채팅에서 만난 남녀가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하다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씨(48)와 B씨(20·여)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이날 0시 30분쯤 광주 서구 광천동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난 사이로 평소 알던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동종 전과가 있는 점으로 미뤄 이들이 마약 투약을 위해 만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술 취한 여직원 성폭행 30대, 항소심서 징역 2년

대구고법 2형사부는 8일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된 전 은행원 A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시설 등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며 “술 취한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양벌을 원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의 한 은행 직원인 A씨는 2016년 1월22일 비정규직인 여직원 B씨 등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 만취한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며칠 후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소속 은행에서 발생한 다른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사내 검찰조사에서 언급돼 불거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관계 시도 상황에 항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과 만남을 지속해 재차 성관계한 사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우수 선수, 후배 폭행·모욕 혐의로 검찰 송치

최근 최속현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경기) 선수가 감독과 동료 선수의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광주에서도 운동 선수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일 폭행·모욕 등 혐의로 전 광주시체육회 소속 우수 선수 A씨(27)가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광주 서구 염주체육관 기숙사에서 후배인 B씨(21)를 수차례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손으로 B씨의 머리를 세게 때리거나 막대기로 엉덩이를 때렸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일삼았다.

술을 마시지 않거나 여자친구를 소개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둘렀고 운동 자세를 교정 시켜주다 화가 난다며 폭행하기도 했다.

B씨는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지난해 11월 협회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협회 측은 A씨에게 출전금지 3회의 솜방망이 처벌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5개월여의 수사 끝에 A씨는 지난달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교육단체, ‘장취국 교육감’ 경찰에 고발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형법 등 위반했다 주장



8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지방경찰청 앞에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관계자들이 장취국 광주시교육감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지역 교육단체들이 8일 장취국 광주시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검경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민정 기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광주지부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광주지방경찰청에 △배우자의 금품 수수 △불공정 인사교류 △인적에 대한 특혜 인사 △불법 선거운동 △공공 유용 등 장 교육감이 받고 있는 의혹들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냈다.

이들은 장 교육감이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형법,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사회에 널리 퍼지고 있는 장 교육감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죄가 밝혀진다면 엄벌해 달라”고 했다.

술집 종업원과 다투다 기어든 손님 폭행 30대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다투는 것에 불만을 제기한 다른 손님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울산 남구의 한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다투던 중 뒤에서 술값을 내기 위해 기다리던 계산이 지연되는데 불만을 제기하는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제작
문의 : junsol@junsol.com
준솔루션